

미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 6.

차 례

I. 출장 개요 / 1

1. 출장 목적	1
2. 출장 지역	1
3. 출장 기간	1
4. 출장단	1
5. 주요 일정	2

II. 출장 결과 /

1. 미국 RAND연구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3
2. 미국 CBO방문 및 MOU체결	11
3.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방문 및 관계자 면담	24
4. IMF 방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면담	35

III. 주요 언론보도 / 42

❖ 참고자료 / 54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방문 및 면담
- RAND 연구소 및 IMF 관계자 면담

2. 출장 지역

- 미국 워싱턴 D.C.

3. 출장 기간

- 2016. 5. 16(월) ~ 5. 20(금) 3박 5일

4. 출장단

- 단장 : 김 준 기 (국회예산정책처장)
- 단원 :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채 미 강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황 중 룰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

윤 주 철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과 예산분석관)

오 지 은 (기획협력담당관실 대외협력담당 주무관)

5. 주요 일정

일 시		주 요 내 용
5.16 (월)	10:30	인천 출발 (KE093)
	11:15	미국 워싱턴 도착
		오찬
	15:00	호텔 체크인
	17:45	RAND 연구소 관계자 면담(Howard J. Shatz, Senior Economist)
	저녁	박선춘 입법관, 박태형 CSIS 파견국장, 박대범 GAO국장 배석 만찬
5.17 (화)	09:30	호텔 출발
	10:00	CBO 면담 및 MOU 협정식
	11:30	방문 종료 및 오찬 이동
	14:00	CSIS 방문 및 면담(Andrew Hunter, Director& Senior Fellow 외 1인)
	이후	의회 참관
		만찬
5.18 (수)	08:30	안호영 주미국대사 주재 조찬
		오찬
	오후	
	18:00	IMF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면담 및 만찬
5.19 (목)	13:35	워싱턴 출발 (KE094)
5.20 (금)	17:10	인천 도착

Ⅱ. 출장 결과

1. 미국 RAND연구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 기관 개요

- 설립년도 : 1948년 (미 공군산하 독립연구소로 설립)
- 소재지 : 1776 Main Street, P.O.Box 2138, Santa Monica, CA 90401-3208
(전화: 310-393-0411, 팩스: 310-393-4818, <http://www.rand.org>)
- 성격 : 미국의 안보,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구, 세계 모든 지역의 정치, 전략, 안보상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독립 비영리, 비당파적 성격의 정책연구기관
 - ※ Santa Monica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 피츠버그, 캠브리지, 도하 등에 지부. 연구수요의 절반은 미국 안보에, 나머지 절반은 외국정부 및 연구소 등을 포함한 고객위주의 관심사항 등에 관련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방 및 핵 무기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축적(현재 약 50%의 연구자금이 국방 관련 분야에 할당)해 왔으나, 최근 10년간 아·태지역 및 중동 등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
- 재원 : 정부(특히 국방부) 보조 및 재단 보조
- 간행물
 -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계간)
 - 「The RAND Review」(연간 3회 발간)
 - Issue Paper, Research Briefs 등 발간

2) 면담 개요

○ 면담자

- Howard J. Shatz(Senior Economist; Director, RAND-Initiated Research; Faculty Member, Pardee RAND Graduate School)
- Rachel Swanger (Pardee Graduate School's Associate Dean)
- Robin Meili(Director of RAND International Programs)
- Rafiq Dossani(Director of RAND's Center for Asia Pacific Policy)

○ 주요 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Howard J. Shatz	
학 력	○ 브라운대학교 역사학 전공 ○ 컬럼비아대학교 국제공공정책학 중동지역 석사 ○ 텔아비브대학교 중동지역학 석사 ○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박사	
전문연구분야	○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 ○ 경제개발, 외국인직접투자(FDI), 국제무역, 안보 분야 ○ RAND 연구소 담당 분야: 몽골 노동시장 개혁,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 공공서비스 개혁, 경제발전정책, 노동시스템, 중국경제 및 중국의 기술기반 발전, 정부에 의한 사회경제 전략의 발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이슈 등	
경 력	○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선임경제위원(2007~2008) ○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원 연구위원 ○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 ○ 연방준비제도 연구위원 ○ 월드뱅크 자문위원(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 일시 : 2016. 5. 16일(월) 17시 45분

○ 장소 : RAND 연구소 워싱턴 지부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본부와의 화상회의



3) 면담 내용

□ NABO와 RAND 양 기관 소개

- NABO의 조직과 구성, 주요 업무
- RAND 연구소의 구성과 특징
- RAND 산하 Pardee Graduate School의 프로그램 소개

□ RAND의 다양한 국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 Pardee Graduate School의 프로그램의 3가지 접근 방식
- RAND의 연구원 전문성 강화 방안
- RAND의 정책평가 프로그램
-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RAND의 접근 방식

□ 국방예산관련 자료 접근성, 분석 방법론

-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네트워킹의 중요성

□ 세부 면담 내용

NABO 처장: NABO는 18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CBO와 GAO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및 예산분석, 경제분석, 조세 분석, 비용추계, 정책 평가 등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기관의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정책대학과 차별화된 RAND만의 접근법이 무엇입니까? 특히, 세계화, 급변하는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RAND 관계자: 우선, RAND산하 Pardee 대학원은 썩크탱크 안에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조연구원으로써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분석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정하고 학위논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RAND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분야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RAND 관계자: RAND의 공공정책 교육프로그램은 학자, 행정실무자, 자문위원, 분석가 등 4As(Academics, Administrators, Advisors, Analysts)의 요구에 모두 적합하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3가지 분야(3 streams)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연구분석과 설계(research analysis and design)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정책문제와 교육과정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studio session”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비평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체화된 접근방식(Embedded stream)입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학생을 보내 다른 RAND 연구원이나 학생과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어떻게 정책을 디자인하고 수행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이 개발되고 입안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10~18개월 동안 지역공동체에 머물면서 전문가와 정책입안자와 함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분야(technologist stream)입니다. 주로 컴퓨터 공학적인 경험이나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먼저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현실의 불확실성에 보다 잘 대처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4~7년 안에 완전한 틀을 갖춘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고 4~7년 안에 완전히 기능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언급한 세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RAND 관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하나의 분야를 선택합니다. 또한 다른 분야를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관심분야는 학생이 선택한 분야입니다.

NABO 처장: 기술적 접근방식은 지속적으로 개발된 분야인가 아니면 최근에 개발된 것입니까?

RAND 관계자: 최근에 개발된 분야입니다. 수년간 우리는 컴퓨터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관련된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시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요구와 현실적인 수요에 대응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AND 관계자: RAND 대학원은 직원들의 단기 교육을 위해 정책분석을 위한 몇 가지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직원들이 기관을 위한 정책분석 과정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1일 세미나, 1~2주 단기 훈련, 고위직을 위한 6주 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직의 구체적 목표에 따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강의요강은 (i) 정책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ii) 주어진 문제에 적절한 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iii)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석은 무엇인가 (iv)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v) 분석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ABO 처장: NABO는 많은 정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AND는 재정사업평가와 관련된 워크숍을 갖고 있습니까?

RAND 관계자: RAND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가르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사업평가와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RAND가 과거에 재정사업평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RAND는 (아시아 서남부 터키·이란·이라크에 걸친)쿠르드 고원지역의 고위 관료와 함께 재정사업들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으며, 오랫동안 3I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에 관여하면서 정책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동시에 연구자로서 정부정책이나 국방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왔습니다. RAND의 핵심적인 강점은 RAND가 수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ABO 처장: 가까운 미래에 NABO가 다루어야 할 주요한 이슈 중 하나는 국방지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관은 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방예산과 사업평가와 관련된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RAND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벌써 행정부의 관련된 씽크탱크와 부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RAND 관계자: 행정부에 관련 연구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요한 문제와 도전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관련 부처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관련된 일을 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NABO 처장: 대학원 학생과 고위간부를 가르치는 것의 주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RAND 관계자: 어떤 교수들은 두 부류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으나 강의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고위간부들은 시간을 압축해서 가르치며, 비록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사례연구집은 아닐지라도 RAND에 의해 개발된 사례연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NABO 처장: RAND 사례연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RAND 관계자: 정책 지향적인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RAND가 지금까지 다양한 고객들을 위해 수행한 정책분석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례연구를 통해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NABO 처장 : 국가재정이나 예산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고 있습니까?

RAND 관계자: 국방예산에 관한 과목이 있었고 한두 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국가재정에 관한 과목은 가끔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공정책 대학원과는 달리 RAND는 재정에 관한 몇 가지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거시재정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NABO 처장: RAND의 교육과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인 접근, 현장연구, 관련 기술습득 등을 요구합니다. 비록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접근방식이 있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RAND는 3가지 접근방식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RAND 관계자: 3가지 접근방식은 현재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향후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좋은 정책분석을 위해서는 3가지 접근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RAND는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팀을 조합하는 것과 함께 각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BO 처장: 한국의 경우 정부관련기관과 주요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옮겨 가면서 서로 정부 관료와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컨퍼런스 관련 기술을 갖고 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컨퍼런스에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책논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AND 관계자: RAND는 보안전용선이 갖고 있으며 보안된 웹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련기술을 통제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보안상 안전한 온라인 회의를 위한 기술이 이용 가능합니다.

RAND 관계자: RAND산하 대학원과 다른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범위한 현장실습에 있습니다. RAND는 내부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매우 독립적입니다. 학생들은 전문연구원과 동일한 이슈와 과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면담기회를 마련하고 주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미국 CBO 방문 및 MOU체결

1) 기관 개요

가. 설립

- 1974년도 의회예산및지출유보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 의해 설립
- 역대 처장
 - Alice M. Rivlin February 24, 1975 ~ August 31, 1983
 - Rudolph G. Penner September 1, 1983 ~ April 28, 1987
 - Robert D. Reischauer March 6, 1989 ~ February 28, 1995
 - June E. O'Neill March 1, 1995 ~ January 29, 1999
 - Dan L. Crippen February 3, 1999 ~ January 3, 2003
 - Douglas Holtz-Eakin February 5, 2003 ~ December 29, 2005
 - Peter R. Orszag January 18, 2007 ~ November 25, 2008
 - Douglas W. Elmendorf January 22, 2009 ~ March 31, 2015
 - Keith Hall April 1, 2015 ~

나. 조직 및 인력

- 처장(Director): Keith Hall
 - 제9대 처장(April 1, 2015 ~)
 - (최근 경력)
the Chief Economist and Director of Economics 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 조직 구성: 8개 실(Division)
 - the Budget Analysis Division;
 - the Financial Analysis Division;
 - the Health, Retirement,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 the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 the Management, Business, and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 the Microeconomic Studies Division;
 - the National Security Division;
 - and the Tax Analysis Division.

○ 인력: 235명(2015년 7월 기준)

— 분석관(Analyst)은 143명이며, 예산분석실에 가장 많이 배치(66명)

〈 CBO의 Analyst 현황 〉 (명)

Budget Analysis Division	66
Defense, International Affairs, & Veterans' Affairs Cost Estimates Unit	10
Health Systems and Medicare Cost Estimates Unit	7
Income Security and Education Cost Estimates Unit	10
Low-Income Health Programs and Prescription Drugs Cost Estimates Unit	8
Natural and Physical Resources Cost Estimates Unit	13
Private-Sector Mandates Unit	3
Projections Unit	7
Scorekeeping Unit	5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st Estimates Unit	3
Financial Analysis Division	5
Health, Retirement,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22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16
Microeconomic Studies Division	12
National Security Division	11
Tax Analysis Division	11



다. CBO의 주요 업무

□ 예산 및 경제 전망(Baseline Budget and Economic Projections)

- 예산연도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기준선 및 경제 전망 발표
 - 기준선은 현행법 및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도출된 전망치
- 기준선 전망 대상은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사업 2천여개(이자지출 별도)
 - 재량지출은 자동산정시스템 구축
 - 의무지출은 분야별로 상이한 비용추계 방법 적용(세입은 조세합동위원회)
- 매년 1월 발간 후 3월, 8월에 수정

□ 대통령 예산안 분석(Analysis of the President's Budget)

- 두 번에 걸쳐 발간(예산위원회 보고 별도)
 - 2월 보고: 예산안 제출(2월초) 10일 후(v1)
 - 3월 발간: 기준선 수정 전망치와 대통령 예산안 재추계 결과(v2)의 차이 발표
 - 4월 발간: 대통령 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v3) 발표
(당해연도 대통령 예산안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유무에 따른 재정적자 분석 포함)

□ 예산대안(Budget Options)

-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한 10년 추계
 - ① 의무지출 대안(사업별), ② 재량지출 감축 대안(사업별), ③ 세수 증가 대안, ④ 적자 유발 대안 등
 - 대안에 따른 정책효과의 장단점을 간략히 제시할 뿐 정책권고는 하지 않음
- 홀수년 2~3월 발간

□ 정책분석(Policy Reports)

-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단에 대해 효과성이나 성과 분석(특히, 예산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초점)
 - 분석은 하되 권고는 하지 않으며, 보고서 형태보다는 상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보고
 - 어느 한 조직에서 담당하지는 않으며 조직간 협업이 강조되고, 참여 인력면에서 예산분석실(82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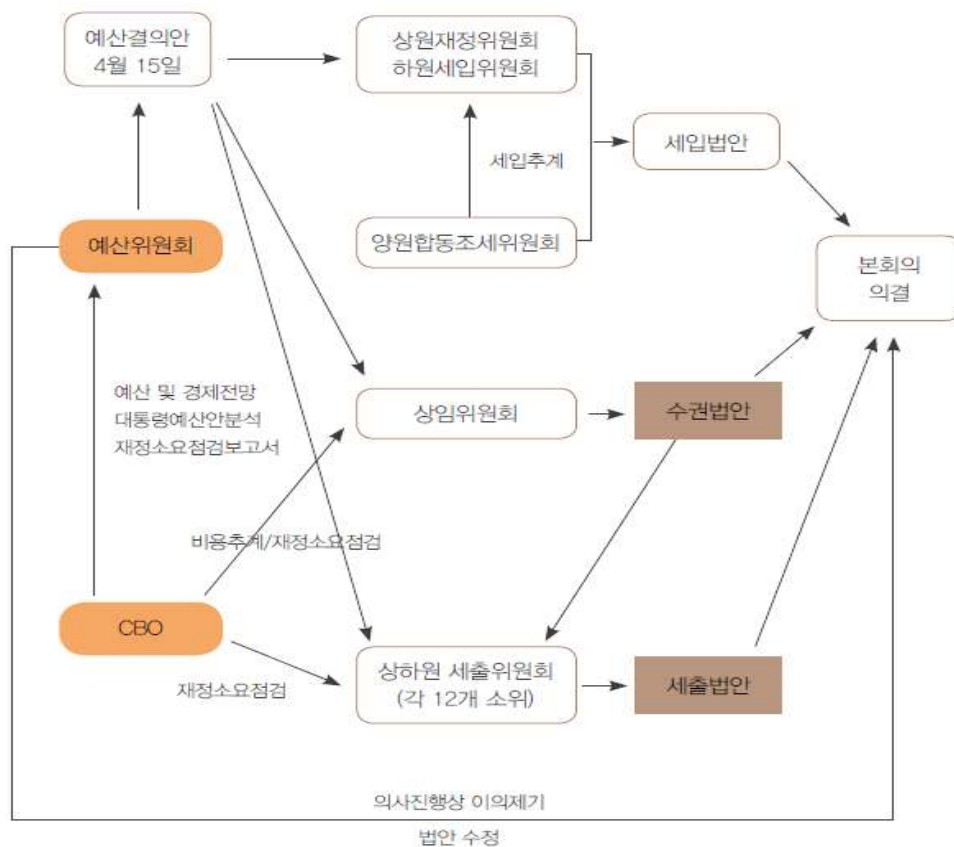
* 거시경제분석실, 조세분석실, 보건 및 인적자원실, 국가안보실, 미시경제연구실, 재무분석실 등

- 비용추계(Cost Estimates) 및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for Legislation)
 - 상·하원의 상임위원회(세출위원회 제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는 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통상 5년)
 - 1974년 의회예산법: 도입
 - 1990년 예산집행법: 의무지출 및 세입에 대한 페이그 원칙 도입
 - 1995년 자금지원 없는 연방명령 개혁법: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도 추계(연방명령에 따라 지방정부 및 민간이 재정부담할 때)
 - 상·하원 상임위원회(세출위원회 제외)의 재정수반법안과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의 재정소요가 예산결의안에 부합하는지 점검
 - 매월 한 번 이상은 예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상시적으로 보고
 - OMB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행정부의 재정소요점검은 OMB 담당)
 - 동태추계(Dynamic Scoring)
 - CBO의 비용추계는 입법에 따른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정태추계)
 - 다만, 2015년 5월부터 주요 법안(Major Legislation)에 한해 10년 동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용추계에 반영(동태분석)
 - 주요 법안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제외한 재정효과가 10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GDP의 0.25% 초과하는 법안(2016년 기준 \$47 billion)
 - 주요 사례: ① Proposal to repeal the Affordable Care Act,
 ② Tax Relief Extension Act of 2015 (estimat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③ Restoring Americans' Healthcare Freedom Reconciliation Act of 2015 (아래 예시)

〈 주요 법안(Major Legislation)에 대한 판단 근거(예시) 〉

	Billions of Dollars, 2025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Changes in Direct Spending (Outlays Only)		
Repeal Individual and Employer Mandates	-35.1	
Repeal the Excise Tax on High-Premium Insurance Plans	-4.1	
Repeal the 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	3.1	
Sum of the Absolute Values of Other Provisions and Interactions	3.0	
Absolute Value of Changes in Direct Spending	45.3	0.16
Changes in Revenues		
Repeal the Excise Tax on High-Premium Insurance Plans	-25.1	
Repeal Individual and Employer Mandates	-14.1	
Repeal the Medical Device Tax	-3.1	
Sum of the Absolute Values of Other Provisions and Interactions	7.0	
Absolute Value of Changes in Revenues	49.2	0.18
Total, Absolute Values of the Budgetary Effects of Provisions and Their Interactions	94.5	0.35

※ 미국의 예산과정과 CBO의 주요 역할



2) 면담 개요

○ 면담자

- Keith Hall(Director of the CBO)
- Robert A. Sunshine(Deputy Director of the CBO)
- Deborah Kilroe(Associate Director for Communications)
- Mark P. Hadley(General Counsel)
- Teresa A. Gullo(Assistant Director for Budget Analysis)
- Jeffrey M. Holland(Unit Chief, Projections Unit, Budget Analysis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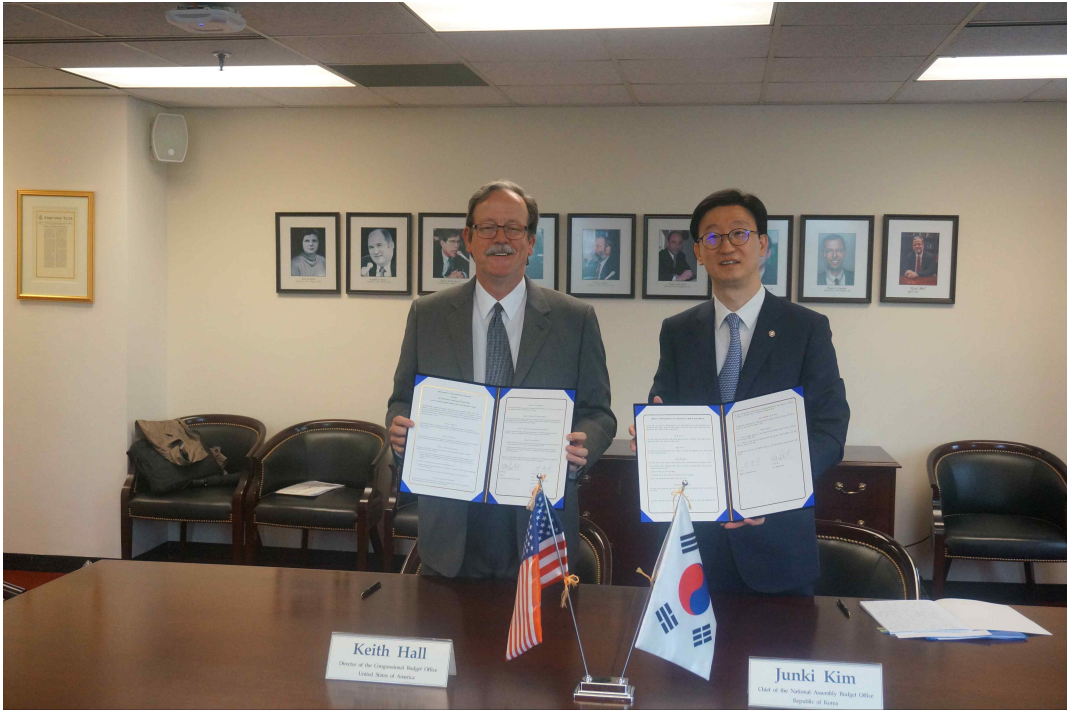
○ 주요 면담자 인적사항

성명	Keith Hall 제9대 처장(April 1, 2015 ~)	
학력	○ 버지니아대학교 경제학, 심리학 학사 ○ 퍼듀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경력	○ 미주리대학교, 아칸소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객원연구원(1991)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응용경제팀장, 선임국제경제연구원 ○ 상무부 수석경제위원(2002) ○ 부시 행정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석경제위원(2005) ○ 노동통계청장(2008) ○ 조지메이슨대학교 부석 메커티스센터 연구위원(201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연구원, 경제국장(2014)	

성명	Robert A. Sunshine	
경력	○ 현재 미국의회예산처 부처장 처장직무대리 수행(2008.11~2009.1) ○ 예산분석실장 ○ 예산분석실 천연·물적자원 비용추계팀장 ○ 예산분석실 분석관 ○ Simat, Helliesen and Eichner 컨설팅회사 선임 컨설턴트 (Senior Associate)	

- MOU체결 및 면담 일시 : 2016. 5. 17일(화) 10시
- 면담 장소 : CBO 회의실







3) 면담 내용

□ 주요 면담 사항

- NABO와 CBO의 구체적 협력 방안
 - － MOU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폭넓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 인적교류 제안: NABO의 연구 인력을 CBO로 파견하는 장기국외훈련 제안
 - － NABO의 국제학술포럼에 CBO 연구자를 초청
 - － 국방예산분석, 비용추계 동태추계모형, 재정전망모형 등의 주요 모형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 방안 마련
- NABO와 CBO 주요 기능의 유사점과 차이점
 - － NABO는 예산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재정 및 경제전망, 사업평가 등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의 주요 질의에 대한 조사분석업무도 담당
 - － CBO는 예산 및 경제분석, 대통령 예산안분석,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 등의 업무 수행
 - － 서로 다른 예산제도와 정치체계에서 오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행업무의 유사점을 서로 공유할 필요
- 정치상황 변화와 독립적 의정지원 기관의 역할

- 정치적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비당파성과 공정성 유지
-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공공서비스 강화
-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정책 이슈
 - 장기재정전망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역할
 - 중장기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 거시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기전망과 장기적 재정정책 방향 제시
- 동태추계(dynamic scoring)관련 이슈
 - 동태추계 방법론, CBO와 의회의 지출위원회와의 관계
 - 동태추계 결과가 예산과정에 미치는 영향
- 내부 역량강화 방안
 -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책대안과 보고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행정부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양질의 자료 확보하고 활용할 필요

□ 세부 면담 내용

NABO 처장: 오늘은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의 13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양 기관은 그 동안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정지원 기관으로써 향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새로 부임한 Keith Hall CBO 처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발전하고 있는 CBO와 우리 NABO가 동태추계, 국방예산지출 분석, 재정전망 등의 분야에서 많은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CBO 처장: 우선, 멀리 한국에서 오신 NABO의 김준기 처장님과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CBO는 미국연방정부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제가 처장으로 부임한 이래 동태분석 등 새로운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한국은 4월 총선을 치른 결과 과거와는 전혀 다른 3당체제로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처는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

서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CBO의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CBO 처장: 모든 당파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상황변화에 상관없이 모든 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결과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NABO 처장: CBO의 예산대안(Budget Option)이 어떻게 실제 예산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습니까? 서로 예산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 NABO의 예산분석보고서 등 예산심의 관련 보고서의 결과가 약 1% 정도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CBO 관계자: 예산대안(Budget Option) 보고서의 경우는 각 대안들을 CBO가 독자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해당 예산사업에 대하여 의회 내에서 제기된 의견, 정부, 민간, 시민단체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여당과 야당, 일반 대중까지 포괄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CBO가 수행하고 있는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의 현재 상황과 방법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과 비용추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BO 관계자: CBO는 관련법에 따라 실행 가능한 정도에서 상원과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해 비용추계(Cost Estimates)와 재정소요점검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CBO의 재정소요점검 인력은 6~7인이며, 비용추계인력은 45~50인 이상입니다. 또한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와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추계는 최근 주요 법안에 대해 동태추계(Dynamic Scoring)를 강제하는 하원 의사규칙(House Rule)이 제정됨에 따라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고려한 20년 동안의 예산효과 추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련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방법론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NABO 관계자: 지난해에 실시한 동태추계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CBO 관계자: 방법에 따라 절충이 가능한 타협점(middle ground)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계결과가 양당에서 기대하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NABO 관계자: CBO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치를 추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5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매 5년 중 1회 이상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BO의 장기재정전망이 매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한 민감도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자율,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거시경제변수, 그리고 재정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 등을 고려한 CBO의 민감도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BO 관계자: CBO의 장기재정전망이 구체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한 확률적이고 통계적 의미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정전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질문하신 대로 경제성장률, 이자율과 같은 중요한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합리적인 구간 하에서 기본시나리오와 다른 다양한 추계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러 다른 가정과 변수값 하에서 큰 그림, 개요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한국의 재정지출 프로그램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NABO 관계자: 노령층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가 모든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관련된 비용은 이미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가가 한국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지출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ABO 처장: CBO는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CBO 처장: CBO의 보고서를 발간할 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CBO의 보고서에 전문성을 보다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나 외부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다양한 시각을 듣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현재 NABO는 국방예산지출과 관련 R&D 사업 평가를 위한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CBO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CBO 관계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보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요청하며, 업무 당사자간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CBO 관계자: 현재 NABO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입니까?

NABO 처장: 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BO 처장: 비용추계, 국방예산 등과 같은 주요 예산분석, 장기재정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NABO의 직원을 CBO로 파견하는 장기국외훈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CBO 관계자: 좋은 제안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NABO 설립 당시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대단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NABO 처장: 그럼, 이번 7월 중순 NABO의 개원기념 포럼에 Jeffrey Holland 과장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주요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미국 CSIS 방문 및 관계자 면담

1) 기관 개요

□ 설립년도: 1962년(당시 AEI 연구원이던 David Abshire가 영국의 IISS를 표방하여 설립)

□ 소재지: 1616 Rhode Island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전화: 202-887-0200, 팩스: 202-775-3199, <http://www.csis.org>)

□ 성격: 국제경제, 정치, 안보 관련문제 등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독립, 비영리 기관으로서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초당파적 정책 연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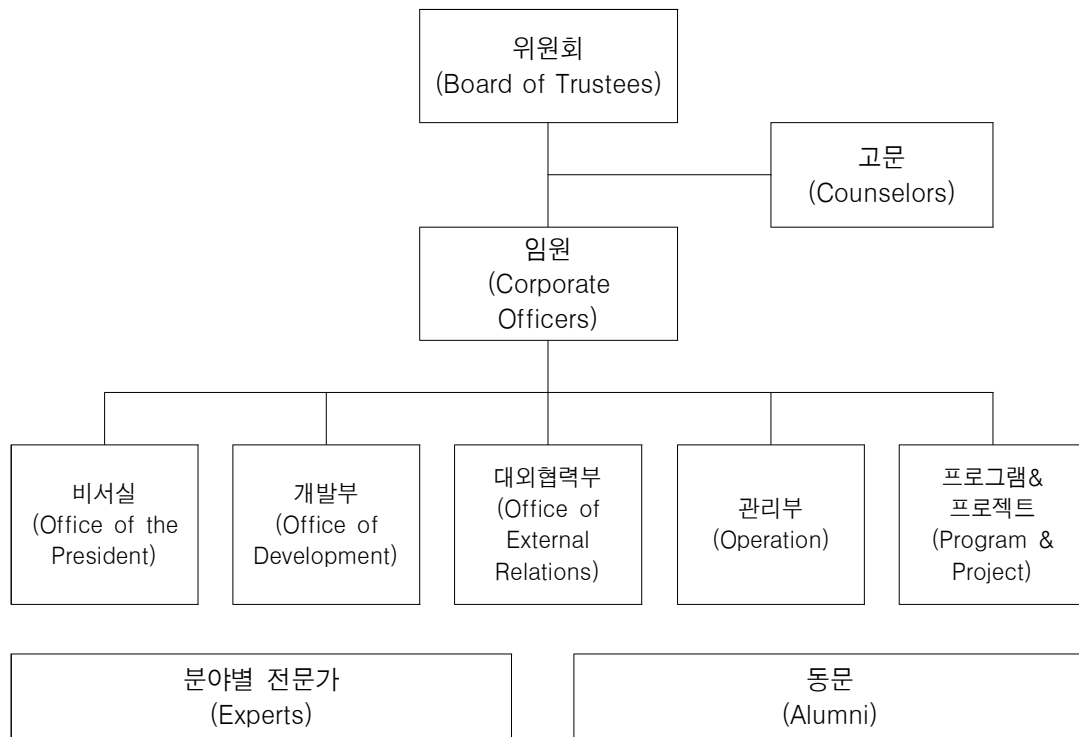
○ 출범초기에는 조지타운대학 부설 연구소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86.9.이래 동 대학에서 분리 운영

○ 70년대 중반 이후 키신저 전 국무장관,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등 당대 석학들이 연구진에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미국내 최고의 외교안보문제 전문 싱크탱크로 성장

○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행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수행함으로써 초당파 싱크탱크로서 명성 확보

○ 보수적 이미지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당파를 초월, 공화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진,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는 평

- 미 정책 전략방향제시 및 세계 각 지역 studies program을 통해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및 보고서 발간



-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연구분야는 (1) 국방과 안보, (2) 국제 개발, (3) 에너지와 지속가능성, (4) 세계 건강, (5) 인권, (6) 기술과 사이버보안, (7) 무역과 경제 총 7개임
- 국방 분야는 총 39명의 전문가가 있음
 - 국방과 관련해서는 국방과 안보 관련 자원 획득과 국토안보, 전략, 재건, 핵문제, 테러리즘 등을 분석함
 - － 테러방지 및 국토안보, 국방예산, 방위 산업·획득·혁신, 방위전략과 방위력, 지정학과 국제안보, 장기전망,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 총 7개 세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함

< CSIS의 국방관련 주요 연구 분야>

분야	내용
테러방지 및 국토안보 (Counterterrorism and Homeland Security)	○ 광범위한 위협에 대비한 기관 구성 방식에 관한 전략적 사고 제공
국방 예산 (Defense Budget)	○ 국방 정책 분야 중요 예산 쟁점 관련 정보 생산 및 분석
방위 산업, 획득, 혁신 (Defense Industry, Acquisition, and Innovation)	○ 세계 방위 산업 기반 현황 및 관리 쟁점 분석 ○ 국방 개혁 관련 쟁점 분석
방위 전략과 방위력 (Defense Strategy and Capabilities)	○ 세계 군사 균형, 비대칭 전투, 지역 갈등 등 쟁점 분석
지정학과 국제안보 (Geo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 안보 관련 위협 및 기회 분석
장기 전망 (Long-Term Futures)	○ 핵심 장기 경향 예측 및 연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 화학, 생물학, 방사성, 핵 무기의 확산과 사용 방지

2) 면담 개요

○ 면담자

- Andrew P. Hunter(Director, Defense-Industrial Initiatives Group and Senior Fellow,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 Todd Harrison(Director, Defense Budget Analysis and Senior Fellow,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 Gabriel Coll(Program Coordinator, Defense-Industrial Initiatives Group)

○ 주요 면담자 인적사항

성명	Andrew Philip Hunter	
학력	○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전공 ○ 존스홉킨스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전문연구분야	○ 국방 및 안보, 국방사업 및 조달, 혁신, 기숙 및 사이버안보 ○ CSIS 담당 분야: 국방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기술 및 국방예산자동삭감, 조달정책, 산업정책 관련 이슈들	
경력	○ 미국 국방부 간부진(2011~2014) ○ 국방부 합동신속조달팀 팀장(2013) ○ 국방부 (당시 차관: Ashton Carter(현재 국방부 장관)/ Frank Kendall) 사무국장(2011~2012) ○ 하원 군사위원회(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조사관 (2005~2011) ○ 하원의회 보좌관(1994~2005)	

성명 (직위)	Todd Harrison (Director, Defense Budget Analysis and Senior Fellow,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학력	○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항공·우주 항공학 학사, 석사	
전문연구분야	○ 국방예산, 국방조달, 군인비용, 군대준비, 핵전력 비용 관련 이슈	
경력	○ 국방예산에 대한 강의(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강사) ○ Military Space Systems에 대한 강의(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강사) ○ 미국 국방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 ○ 국방 분야 컨설팅회사(Booz Allen Hamilton) 근무 ○ 연방공군예비군 팀장	

- 일시 : 2016. 5. 17일(화) 14시
- 장소 : CSIS본부 회의실





3) 면담 내용

□ 주요 면담 사항

- 국방예산분석에서 직면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국방 예산에서 쟁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론
- 단년도 국방예산안 분석과 중장기적 다년도 분석의 균형
- 자동 예산 삭감(Sequestration)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 국방예산 및 정책 평가의 특징
 - － 타 분야와 달리, 예산투입과 성과 간 정량적 분석 곤란
 - － 기준이 되는 예산투입의 실질가치 정량화 곤란
- CSIS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방안
 - － 방위산업체 외 다양한 재원을 확보
 - － 자금 조달원와의 사전 MOU체결을 통한 보고서의 독립성 유지 노력
- 한국과 미국의 국방 분야 협력 방안
 - － 북한의 GPS 방해전파 극복을 위한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등

□ 세부 면담 내용

NABO 처장: NABO는 미국의 CBO에 상응하는 조직으로서 예결산, 조세, 경제분석,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강화하고자 하는 기능 중 하나가 국방 분야 예산 및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과거 대한민국국회는 정보비대칭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국방예산을 분석하거나 중요한 정책제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조직의 국방관련 분석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CSIS 관계자: 미국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도 종종 그들의 내부 자료나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SIS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SIS는 국방부 바깥에 있는 조직이고, 국방부 내부에서 예산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SIS 관계자: 미국만의 독특한 시스템 중의 하나는 의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임기에 걸쳐 재임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과거 행정부에서 일했던 경력과 함께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정보 접근능력이 뛰어납니다.

NABO 처장: 2017년 미국의 국방예산을 예로 들어 쟁점을 파악하고 과거와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SIS 관계자: 국방부가 직접 분류하고 공개하는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건비 항목에 관한 예산을 보고 이것이 군에서 일하는 인력의 보상에 관한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반 이상의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이나 혜택은 국방부 예산이 아니라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지불합니다. 약 800~900

역불에 달하는 부채는 재무부에서 직접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방부와 관계되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국방예산에서 전력유지비(O&M: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력이 증가하면 전력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일인당 운영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NABO 처장: 주어진 예산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전에 남한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든지, 관련 자료를 보고 주어진 예산안이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습니까?

CSIS 관계자: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병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CSIS는 주관적인 분석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은 주관적 분석보다 덜 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량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의 범위를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국방예산의 집행결과를 살펴본 결과 예상된 항목으로 자금이 잘 흘러가지 않았다면, 관련 전략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대신 주어진 예산이 잘 쓰였는지, 필요한 비용을 잘 반영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CSIS 관계자: 2013년부터 도입된 예산 자동삭감(Sequestration)에 의해 전략적 선택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즉, 시퀘스트레이션에 따라 국방부가 전망했었던 것보다 국방예산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자금사정 하에서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느냐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다행히 지난 20여년간 미군이 수행한 광범위한 임무로 인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에 관한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비용에 관한 정량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 어디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주요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어떤 희망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질 경우에는 커다란 과오 없이 주어진 예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충분하지 않은 자금 하에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주어진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평상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비상상황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전투임무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과소하게 추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NABO 처장: 국방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다르게 단일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SIS는 단년도 예산 분석과 장기 재정 분석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습니까?

CSIS 관계자: 매년 예산분석을 수행하면서 5년간의 장기 재정전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요구가 있을 때마다 5년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국방분야가 변화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전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NABO 처장: 의회를 통과한 최종 국방예산은 최초 정부안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CSIS 관계자: 당해 연도의 무기도입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2015년도 예산안만 제외하고 대통령예산안은 의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 심사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처는 그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요구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지난 해보다 증가할 것입니다.

NABO 처장: 정책분석을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무기 매입 등 특정한 국방 사업 및 정책의 결과를 평가하려 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까?

CSIS 관계자: 정량화할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관

련된 위험 또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투비행사의 비행거리, 속도 및 정확도 등은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예산처럼 자금 투입과 계획된 임무가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계획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과 협조하여 군사계획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SIS 관계자: 장기적인 무기도입 프로그램처럼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주어진 비용 전망이 실제 가치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임무수행능력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NABO 관계자: CSIS는 여러 루트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Boeing이나, NORTHROP GRUMMAN과 같은 방위산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는지,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어떤 검토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CSIS 관계자: CSIS는 정부나 정당으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연구는 연구계획에 따라 자금조달자의 영향을 받을 위험에 좀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자금조달 파트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연구자는 보고서가 질과 독립성의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CSIS 관계자: CSIS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양쪽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MOU 문건에는 CSIS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한 편집권을 해당 기관이 갖지 않으며,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보고서를 검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보고서의 작성자가 정책 분석가로서 논리, 증명, 실증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CSIS 관계자: 방위산업체 외에도 다양한 자금원이 있고, 정부나 재단으로부터 오는 부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혹여 일부 회사가 자금을 조달을 중단하더라도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이 특정 보고서에 대한 반감으로 재정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긴 하나,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CSIS는 수년에 걸쳐 한국의 국방 여건이나 주변국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sia-Pacific Rebalance 2025”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사드(THAAD) 배치를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한국의 국방정책과 무기도입 정책에 관해 또다른 권고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CSIS 관계자: 향후 한미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우주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GPS 방해전파 사용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방해(재밍)를 줄이고 극복할 GPS 능력(항재밍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GPS constellation 안에만 이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이나 다른 동맹국과 협력한다면 해당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군이나 주변 동맹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ABO 처장: CSIS는 ‘Defense 360’ 등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도 국방 분야의 예결산 및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ABO 또한 관련된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데, CSIS의 조직 운영 및 분석방법론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향후에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4. IMF 방문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 면담

1) 기관 개요

- 설립일자 : 1945. 12. 27(우리나라는 1955. 8. 26 가입)
- 설립목적 :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 안정
- 가맹국 : 187개국
- 자본금 : 2,173억SDR
 - 우리나라 출자현황 : 2,927.3백만SDR
 - 쿼터(지분) 비중 : 1.35% (전체 가맹국 중 19위)
- 주요기능
 - 가맹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규제에 대한 감시
 - 가맹국의 국제수지조정 지원
 - ◆ 재원조달 : 가맹국의 쿼터납입금
 - ◆ 가맹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지원대상 : 주로 일시적 국제수지 적자보전에 필요한 단기자금 (8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 경제구조조정자금 지원도 병행)
 - 기술지원, 연수, 조사연구 및 통계편제 등 기타
- 조직: 조직총회, 이사회(24인의 이사)
- 총재(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2) 면담 개요

○ 면담자

- Changyong Rhee(Director, Asia and Pacific Department)
- Joongshik Kang(Senior 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 Jongsoon Shin(Senior 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 Geehee Hong(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 주요 면담자 인적사항

성 명	Mr. Changyong Rhee (Director, Asia and Pacific Department)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문연구분야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재무경제학(Financial Economics) ○ 한국경제학(Korean Economy)	
경 력	○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위원, 경제대변인 ○ 한국 G20정상회의 사무처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로체스터대학교 조교수 ○ 청와대 대통령실, 재무경제부, 한국은행 등 자문위원	

○ 일시 : 2016. 5. 18일(수) 17시 50분

○ 장소 : IMF 이창용 아시아태평양국장 집무실



3) 면담 내용

□ 주요 면담 사항

- IMF의 세계경제 상황 인식
 - － 지난 4월의 세계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 －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상·하방 위험요인
- 중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
 - － 중국의 균형성장을 위한 개혁이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 중국의 성장 위험요인
 - － 중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방향
- 한국의 향후 경제전망과 구조개혁의 방향
 - －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방향

□ 세부 면담 내용

NABO 처장: IMF가 지난 4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비해 0.2%p 하향조정
정한 주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IMF 관계자: 우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취약
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세가 약화되고 선진국의 경기회복도 예상보다 더뎠고 있습니다. 원유수출국
과 브라질, 러시아 등의 원자재수출국은 원유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경기침
체와 금융불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은 12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는 결실하나 강달러에 따른 외수부
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올해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
되지만 내년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NABO 처장: 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세계경제성장률 전
망치는 지난 1월에 비해 하향조정된 데 반해 중국의 성장률은 오히려 2016년
은 6.3%에서 6.5%로, 2017년은 6.0%에서 6.2%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일 것입니
다.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MF 관계자 : IMF 내부에서도 중국의 향후 성장경로와 위험요인에 관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비관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제13차5개년 계획에서 밝힌 구조개혁의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쓰이는지, 단순히 과거의 투자를 통한 성장엔진을 부양할지 여부에 따라 과잉투자과 금융부실로 인한 중기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정부의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성장률이 상향조정되었지만, 중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위험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F 관계자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효과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균형성장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세계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오는 파급효과는 무역경로를 통해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경로에서 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의존정도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 중국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국가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투자재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점차 통합되면서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세계원자재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중화학 공업의 원료로 쓰이는 금속, 철광석, 니켈 등의 원자재수요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원유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희석되었으나 균형성장전략이 식량수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NABO 처장: 위와 같이 세계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불확실이 커지고 있는 경제여건 하에서 선진국 및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IMF 관계자 :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한국은행법 개정이나 절차 등의 재원조달 방안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 등도 함께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IMF 관계자 :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로 대단히 완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저유가와 내수성장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2~3년 내에 커다란 성장위험이 오진 않겠지만 중기적으로 지금이 성장률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III. 주요 언론보도

[국회ON, 2016.5.12.]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손잡는다

미국의회예산정책처와 양해각서 체결 예정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의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와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CBO가 외국 의회 재정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예정처는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RAND 연구소,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등 국제 협력 행보도 확대한다.

김준기 예산정책처장과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 등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CBO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해 미국행에 오른다.

이번 MOU에는 △예·결산분석, 중장기 경제전망, 재정사업평가, 비용추계 등 의정지원 업무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관련정보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상호협력 △양 기관 연구인력 및 직원 간 상호교류 △기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등 양 기관의 업무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CBO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근거해 1975년 2월 설립된 미 의회 소속 기관이다. 주로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 및 예산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전망, 장기예산전망, 대통령 예산안 분석, 예산대안(budget option) 작성, 법안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기타 정책분석, 위원회 지원, 연방위임명령(UMRA 분

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MOU체결에 NABO측에서는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 채미강 예산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윤주철 예산분석관, 오지은 대외협력주무관이 참석하고, CBO에는 Keith Hall 의회예산처장, Robert A. Sunshine 의회예산부처장 등이 나설 예정이다.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1975년에 설립된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라면서 "설립 13년이 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NABO, 주요 경제·예산·정책 기관과 스킨십 늘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미국행에는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랜드연구소 주요인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CSIS는 국제경제, 정치, 안보 관련문제 등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독립, 비영리 기관으로서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초당파적 정책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출범초기 조지타운대학 부설 연구소였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1986년 9월 이후 대학에서 분리 운영됐다.

예정처는 우리에게 구제금융기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IMF도 찾을 예정이다. 1945년 설립된 IMF는 주로 가맹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규제에 대한 감시, 가맹국의 국제수지조정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RAND연구소는 1948년 미 공군산하 독립연구소로 설립됐다. Santa Monica에 본부를 두고 있고 워싱턴, 피츠버그, 캠브리지, 도하 등에 지부를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방 및 핵무기 관련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축적(현재 약 50%의 연구자금이 국방 관련 분야에 할당)해 왔으나, 최근 10년간 아·태지역 및 중동 등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5.17.]

국회예산정책처, 美의회예산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은 이날 오전 CBO 회의실에서 케이스 홀 CBO 처장과 양해각서 조인식을 가졌다.



'협력 양해각서' 체결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케이스 홀 美의회예산처장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 관심사인 예산분석과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BO가 외국 의회의 재정 전문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산정책처는 미 의회의 각종 재정·경제 분석 및 전망, 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 의회 소속 재정분석기관인 CBO는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해 1975년 2월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과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재정 소요 점검, 예산의 국가재정 영향 분석, 대통령 예산안 분석, 정책 분석 등이다.

4년 임기의 CBO 처장은 상·하원 예산위원회 추천과 상·하원의장 합의 절차에 따라 지명되며 총 8개 실에 240여 명이 근무한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17 23:30 송고

[노컷뉴스, 2016.5.18.]

국회예산정책처, 美의회 예산분석 노하우 공유

(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산분석과 중장기 경제 재정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예산처에서 케이스 홀 CBO처장과 양기관의 상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예산분석과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이 포함돼 있다. CBO가 외국 의회의 재정 전문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미 의회의 각종 재정 경제 분석과 전망, 추계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BO는 미 의회의 재정 정보 확보를 위해 1975년 설립됐으며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과 중장기 경제 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재정 소요 점검, 예산의 국가재정 영향 분석, 대통령예산안 분석, 정책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594624>

[일간NTN, 2016.5.18.]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선진의회 재정분석기관 주요 직무 교류·협력으로 분석 노하우 공유, 의정지원 업무 고도화 계기될 듯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비용추계 등 의정 지원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관련정보 교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17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 예산처(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선진의회들의 각종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임기가 4년인 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CBO의 주요 업무는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 ▶예산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통령 예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이다.

[뉴스1, 2016.5.18.]

국회 예산정책처, 美 의회예산처와 협력 MOU 체결

공동연구,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상호 교류협력 촉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윤균 인턴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의회예산처에서 미국의회예산처와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 사이에 △핵심직무 공동연구(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 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선진의회와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다.

[국회ON, 2016.5.18.]

예정처, 美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5월 17일 美의회예산처 회의실에서 Keith Hall 처장과 상호교류 협력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가 5월 17일(워싱턴 D.C 기준)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양 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CBO가 외국 의회 재정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선진의회와 각종 재정·경제분야 분석과 전망, 추계기법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됐다. 임기가 4년인 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브릿지경제, 2016.5.18.]

국회예산정책처, 美 의회예산처와 양해각서 체결...“노하우 공유한다”

(김진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서로가 보유한 재정·경제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키스 홀(Keith Hall) 미 의회예산처장을 만나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상호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 업무에 대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 의회예산처가 외국 의회 재정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MOU에 대해 “미 의회가 보유한 선진적인 분석·전망·추계 기법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지난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목표로, 국회 예산위원회의 예산결의안 작성 지원,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법률안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예산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통령 예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감신문, 2016.5.18.]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예산처와 MOU 체결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한 상호협력

[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지난 5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처장 Keith Hall)에서 양기관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두 기관 간의 공통관심사항인 예산분석,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법률안 비용 추계 등 핵심직무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직원 간 상호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미국 의회예산처가 외국의회의 재정전문기관과 체결하는 최초의 MOU로서, 선진의회들의 각종 재정·경제분야의 분석·전망·추계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지원 업무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1975년 2월 설립된 의회 소속의 재정분석기관으로 의회 자체의 재정정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임기가 4년인 처장(현 처장은 Keith Hall)은 상하원 예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상하원의장의 합의로 공동 지명하며, 8개실에 총 2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 참고자료

가. 미국 의회예산처(CBO)와의 협력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itutions") have shared the view on the need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have decided to establish a formal relationship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containing the following provisions on May 17, 2016.

Section 1 (Purpose)

The Institutions intend to facilitate and formalize exchange and cooperation on the matters of common interest and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the areas of cooperation identified in Section 3 below.

Section 2 (Obligation)

The Institutions plan to discuss the issues of common interest, collaborate on the collection of relevant materials and information, and fully abide by the rules and practices of the Institutions.

Section 3 (Areas of Cooperation)

Pending the availability of funding and other resources, the Institutions inten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areas.

- ① Joint research and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to reinforce legislative support service through analysis on the budget and account settlement, medium- to long- term economic outlook, evaluation on the program that requires implementation of budget and funds, cost estimates;
- ② Mutual cooperation through seminars and workshops, etc.;
- ③ Mutual exchange of research personnel and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Institutions; and
- ④ Cooperation in other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exchange of relevant information

Section 4 (Seminars and Workshops)

The Institutions intend to hold seminars and workshops through mutual visits for the purpose of further promoting exchange in the area of common interest.

Section 5 (Cost Estimates)

The Institutions intend to cooperate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in cost estimates and endeavor to share estimates methods and carry out joint research.

Section 6 (Channels of Communication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is MOU, each Institution intends to designate a primary point of contact and notify the other Institution in writing, provided that the channels of communications are not exclusively limited to the primary point of cont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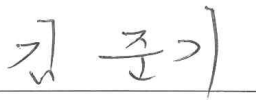
Section 7 (Effective date, Amendment and Termination)

Activities under this MOU may commence upon signature by the official representatives of the Institutions, and may be modifi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Institutions.

Section 8 (Non-Disclosure)

- ① Each Institution is expected to hold each other's proprietary/comp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strict confidence and use it only for the purposes described above.
- ② Neither Institution intends to disclose any of the other's proprietary/company-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organization, or corporation without the other Institution's prior written approval.

Signed at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ased in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is 17th day of May, 2016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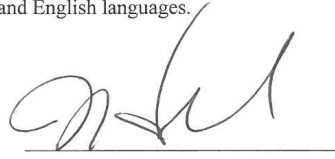


Junki Kim

Chief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Republic of Korea



Keith Hall

Director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의회예산처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6년 5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 의회예산처(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의 양해각서(MOU)를 통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절 (목 적)

양 기관은 상호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공식화하며, 아래 제3절에 명시된 협력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제2절 (의 무)

양 기관은 상호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협력하며, 양측의 규칙과 관행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제3절 (협력분야)

양 기관은 재원 및 기타 자원의 가용성을 전제로 다음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① 예·결산분석, 중장기 경제전망, 재정사업평가, 비용추계 등 의정지원 업무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관련정보 교류
- ②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상호협력
- ③ 양 기관의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둔 연구인력 및 직원간 상호교류
- ④ 기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제4절 (세미나 및 워크숍)

양 기관은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방문하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 고자 한다.

제5절 (비용추계)

양 기관은 비용추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추계기법공유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6절 (의사전달 경로)

각 기관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 연락담당자를 임명하여 이를 서면으로 정식 통보하고자 한다. 단, 의사전달 경로는 주 연락담당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7절 (효력발생, 수정 및 해지)

본 양해각서에 의거한 활동은 양 기관의 공식 대표자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양 기관의 상호 서면 동의 하에 수정될 수 있다.

제8절 (기밀유지)

- ① 각 기관은 상대방의 전유정보 및 기관기밀정보에 대하여 엄밀히 기밀을 유지하고, 상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 ② 각 기관은 타 기관의 비밀 및 기밀정보를 제3자 혹은 기관 또는 기업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누설할 의도가 없다.

본 양해각서는 2016년 5월 17일 미합중국 워싱턴 DC 소재 의회예산처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김준기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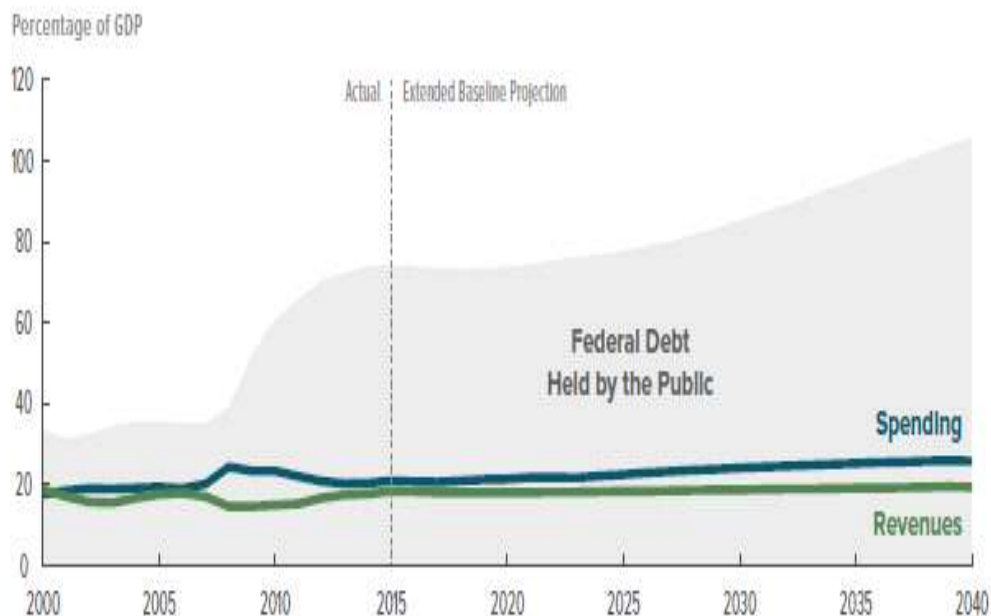
키이스 훌

미국 의회예산처장

나. 미국의회예산처(CBO)

□ 최근 CBO의 재정전망

- 매년 2~3회(통상 1월, 3월, 8월)에 걸쳐 10년 재정전망(10-year Budget Projection) 발표
 - 올해는 지난 1월과 3월 2회 걸쳐 2026년까지의 재정전망치 발표
- 매년(통상 6월) 장기재정전망(Long-term Budget Projection) 발표
 - 10년 재정전망을 단순 연장하여 75년간의 재정지출, 수입, 재정수지, 국가부채 전망(Extended Baseline Projection)
 -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15~2090년)
- 지난해 발간된 CBO의 장기재정전망보고서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에 초점을 맞춤
 - 국가부채/GDP: 2015년 74.2% → 2040년 103% → 2090년 181%
 - 재정적자/GDP: 2015년 2.7% → 2040년 5.9% → 2090년 9.5%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의 경기침체와 느린 경기회복세,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누적
 - 2008~2012년 기간 중 총 \$5.6조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2015년의 국가부

- 채/GDP비율은 73.6%로 급증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향후 10년 중 미국의 재정적자는 인구고령화, 의료지출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
 - 재정적자/GDP비율은 2017년까지 소폭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25년에는 4%에 이를 전망
 - 향후 10년 기간 중 누적 재정적자규모는 총 \$7.4조, 2025년 국가부채/GDP는 78%로 증가
 - 2040년 미국의 재정적자/GDP는 5.9%, 국가부채/GDP는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the extended baseline)
 - 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2015년 20.5% → 2040년 25.3%로 급증하고, 부문별로 보면 (i) social security and major health care program의 GDP 대비 비중: 2015년 10.1% → 2040년 14.2% (ii) 순이자지출의 GDP대비 비중: 2015년 1.3% → 2040년 4.3%
 - 반면 재정수입의 GDP대비 비중은 2015년 17.7% → 2040년 19.4%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고, 이는 주로 개인소득세 증가에 기인(2015년 8.4% → 2040년 10.4%)
 - 높은 국가부채 수준과 실효한계세율의 증가가 총생산과 이자율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macroeconomic feedback effect)를 고려할 경우 2040년 재정적자/GDP는 6.6%, 국가부채/GDP는 107%로 악화

Summary Table 1.

Key Projections Under CBO's Extended Baseline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2015	2025	2040
	Without Macroeconomic Feedback ^a		
Revenues			
Individual income taxes	8.4	9.5	10.4
Payroll taxes	5.9	5.7	5.7
Corporate income taxes	1.8	1.8	1.8
Other sources of revenues	1.7	1.2	1.5
Total Revenues	17.7	18.3	19.4
Spending			
Mandatory			
Social Security	4.9	5.7	6.2
Major health care programs ^b	5.2	6.1	8.0
Other mandatory programs	2.6	2.3	1.8
Subtotal	12.7	14.1	16.0
Discretionary	6.5	5.1	5.1
Net interest	1.3	3.0	4.3
Total Spending	20.5	22.2	25.3
Deficit	-2.7	-3.8	-5.9
Debt Held by the Public at the End of the Year	74	78	103
	With Macroeconomic Feedback		
Deficit	-2.7	-3.8	-6.6
Debt Held by the Public at the End of the Year	74	78	107

○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가 미국의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What consequences would a large and growing federal debt have?)

-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의 지불능력에 대한 불신과 이자율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으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 재정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국가가 많은 자본을 차입함으로써 민간의 생산적인 자본축적(투자)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산출량과 소득을 낮춤
- 재정지출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세금인상과 공공서비스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금융위기나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제한될 수 있음

○ 현재의 재정정책(세제와 지출관련법)이 달라질 경우의 재정전망은?

(What effects would alternative fiscal policies have?)

- (i) 현재의 재정정책 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조항이 수정되고 각 지출부문 별 GDP대비 비율이 역사적 추세를 유지할 경우(the alternative extended baseline):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조세감면으로 산출량과 고용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시나리오(the extended baseline)보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 2040년 국가채무/GDP 175%로 폭증
- (ii) 재정적자를 기본 시나리오보다 2025년까지 총 \$2조 줄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GDP’를 2025년과 같은 비율로 감소시킬 경우(the first illustrative scenario):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감소와 조세증가로 산출량과 고용이 감소하지만 2040년 ‘국가채무/GDP’ 72% 수준 유지

- (iii) 재정적자를 기본 시나리오보다 2025년까지 총 \$4조 줄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GDP’를 2025년과 같은 비율로 감소시킬 경우(the other illustrative scenario):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감소와 조세증가로 산출량과 고용이 감소하지만 2040년 ‘국가채무/GDP’ 39%로 축소

○ 장기재정전망의 불확실성: 민감도 분석 (How uncertain are the long-term fiscal outlook?)

- 재정전망치는 세제와 지출관련법이 변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등이 예상과 다를 경우 크게 변동
 - 보고서는 사망률,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이자율, 의료보장(medicare and medicaid) 지출 등의 4가지 요소가 변동할 때 재정전망치의 변동을 살펴봄
 - 각 변수가 지난 25년 기간 중의 기간평균 변동폭으로 변할 경우
 - 각 변수가 지난 25년 기간 중의 기간평균 변동폭의 60%수준에서 변동하고 4개 변수의 결합된 변동치가 기본전망치보다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할 경우
- ==> the extended baseline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향후 미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대안은? (What choices do policy makers have?)

- 현재의 재정정책(tax and spending law) 하에서는 2020년 이후 국가부채는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 →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자체를 저해할 가능성
-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경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지출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2040년까지 국가부채/GDP비율을 38%(지난 50년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 향후 25년간 매년 GDP의 2.6%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비이자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가능
 - 향후 25년간 매년 재정수입을 기본전망치(the extended baseline)보다 14% 증가시킴 ==> 매년 가구당 federal tax 평균 \$1,700 증가
 - 향후 25년간 매년 비이자 재정지출을 기본전망치(the extended baseline)

보다 13% 감소시킴 ==> 매년 1인당 사회보장혜택 평균 \$2,400 감소

- 반면 2040년까지 국가부채/GDP비율을 74%(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 향후 25년간 매년 GDP의 1.1%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비이자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가능
 - 향후 25년간 매년 재정수입을 기본전망치(the extended baseline)보다 6% 증가시킴 ==> 매년 가구당 federal tax 평균 \$750 증가
 - 향후 25년간 매년 비이자 재정지출을 기본전망치(the extended baseline)보다 5.5% 삭감시킴 ==> 매년 1인당 사회보장혜택 평균 \$1,050 감소

Summary Figure 1.

The Size of Policy Changes Needed Over 25 Years to Make Federal Debt Meet Two Possible Goals in 2040

If Lawmakers Aimed for ...



- 정책변화 시점에 따른 trade-off가 존재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시행 시점이 빠를수록 누적 국가부채가 적고 요구되는 정책변화의 폭도 크지 않으나, 갑작스런 재정지출 삭감이나 조세증가로 경기회복이 더더질 가능성도 존재
- ※ 정책시행 시점을 2021년으로 지연시킬 경우 2021~2040년 기간 중 매년 GDP의 3.2%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비이자 재정지출을 줄여야만 2040년까지 국가부채/GDP비율을 38%(지난 50년 평균)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 향후 몇 년 내에 재정지출 삭감이나 증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연시키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실제로 향후 몇 년간 실제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정책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경제주체의 신뢰를 개선시키는 효과 발생

□ 비용추계(Cost Estimates)

- 비용추계는 CBO의 미시 예산분석(microbudgeting)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거시 예산분석(macrobudgeting)에 해당하는 예산 및 경제 전망(Baseline Budget and Economic Projections)과 구분
 - CBO는 예산연도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기준선 및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기준선은 현행법 및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도출된 전망치
 - 비용추계는 이러한 기준선 전망 대비 새로운 법안의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의회 차원의 재정 총량 산출 및 점검, 예산위원회가 의결하는 예산결의안의 한도액 준수 여부 확인에 활용
- 상·하원의 상임위원회(세출위원회 제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는 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통상 5년)
 - 1974년 의회예산법: 도입
 - 1990년 예산집행법: 의무지출 및 세입에 대한 페이고 원칙 도입
 - 1995년 자금지원 없는 연방명령 개혁법: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도 추계(연방명령에 따라 지방정부 및 민간이 재정부담할 때)
- 비용추계는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직접지출)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지출은 제외
 - 지출(spending)은 예산권한(budget authority)과 세출(outlays)로 구분
 - 재량지출의 예산권한은 지출승인법(the Appropriation Acts)에 의해 부여되며, 개별법을 통해 사업이 승인되어도 지출승인법에 반영되어야 예산권한 발생
 - 의무지출은 수권법(the Authorization Acts)에 의해 예산권한 부여, 해당 법 통과시 바로 발생하며 매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의무지출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만큼의 다른 의무지출의 감소가 필요(페이고pay-go 원칙 적용)하므로 별도 항목으로 추계(추계 기간은 일반적인 비용추계와 마찬가지로 5년이지만, 기준선 전망처럼 관례적으로 10년 추계)
 - 세출은 한 회계연도 내 실제 지출을 의미(지출율에 따라 예산권한 수준을 연도별 배분)

< 비용추계 사례: 예산권한과 세출의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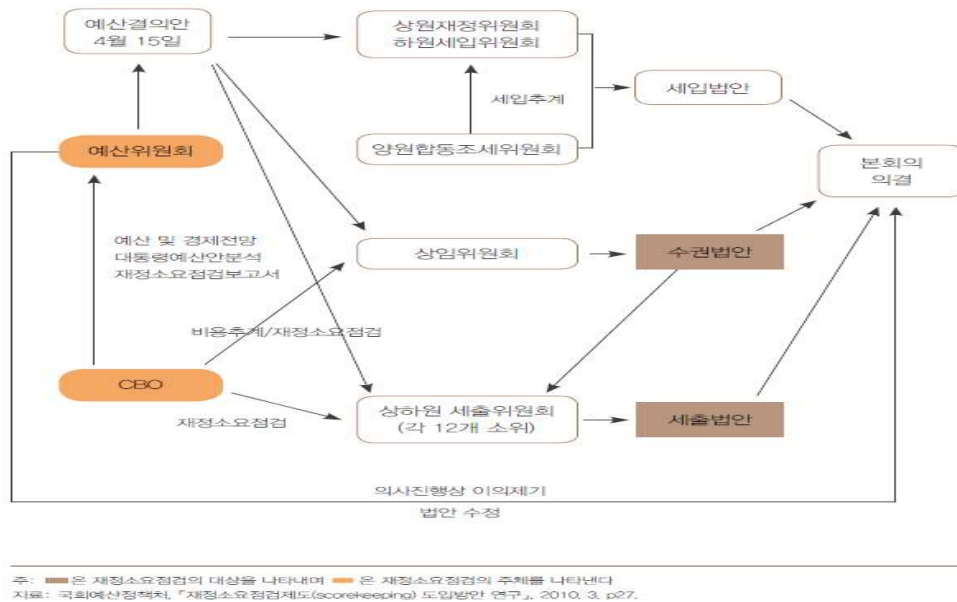
	By Fiscal Year, in Millions of Dollars					2017-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CHANGES IN SPENDING SUBJECT TO APPROPRIATION						
Estimated Authorization Level	23	0	0	24	0	47
Estimated Outlays	20	3	0	21	3	47

- 비용추계는 점추정(point estimates)에 근거한 하나의 추계치 제시
 - 동태추계(dynamic scoring)에서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간추정의 중간값을 사용하며 민감도분석 등 적용
- 공식 비용추계 건수는 일 년에 400~600건 정도
 -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는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추계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추계 다수
 - 비공식적인 추계는 법률 입안 전에 비공식적으로 수행되는 예비적 추계

□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 for Legislation)

- 재정소요점검은 상·하원 상임위원회(세출위원회 제외)의 재정수반법안과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의 재정소요가 예산결의안에 부합하는지 점검
 -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안(수권법안)과 세출승인법안을 대상으로 재정소요점검을 수행하며, 예산결의안에서 정한 상한선 준수 여부 점검
 - 매월 한 번 이상은 예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상시적으로 보고
 - 점검 결과 예산결의안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서 이의제기(point of order) 가능(심사중단, 수정)
 - 따라서 제출된 법률안이 예산결의안을 위배하는지, 상원이나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 대상인지 확인
- OMB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행정부의 재정소요점검은 OMB 담당)
 - 의회와 대통령 간의 영수예산회담에서 합의되는 적자축소 규모를 계산하거나 조정법안을 만들 때 재정소요점검 활용
 - 예산심사가 종료된 이후 한도를 넘는 지출 결정에 대하여 일괄적인 삭감(sequestration) 가능
 - OMB는 CBO가 제출한 일괄삭감보고서를 참조하여 공식적인 일괄삭감보고서(sequestration report)를 작성

CBO의 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과정



□ 동태추계(Dynamic Scoring)

- CBO의 비용추계는 입법에 따른 행태 변화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정태추계)
 - 다만, 2015년 5월부터 주요 법안(Major Legislation)에 한해 10년 동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용추계에 반영(동태분석)
- 동태추계는 법제도 변화로 인한 모든 경제적 효과 고려하여 추계하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한 최선의 추계가, 중요한 효과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Barry Anderson, 2010)에 충실
 - 2014년에 법제화(「Pro-Growth Budgeting Act of 2014」)하려고 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5년 1월 하원규칙으로 주요 법안에 대해 실시
 - 동태추계 수행에 있어 행태변화 예측 곤란, 추계 범위의 크기 등 불확실성이 커 중간값middle 사용
 - 추계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며, 장기 재정적자 및 의무지출 영향을 고려한 20년 추계는 정량적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 분석도 포함
- 동태추계는 추계방법론의 문제, 조작가능성, 정치적 중립 저해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CBO는 추계의 기본가정과 방법론 등을 적극 공개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음

- 동태추계의 대상 주요 법안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제외한 재정효과가 10년 동안 어느 한 해라도 GDP의 0.25% 초과하는 법안(2016년 기준 \$47 billion)
 - 주요 사례: ① Proposal to repeal the Affordable Care Act,
 - ② Tax Relief Extension Act of 2015 (estimat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③ Restoring Americans' Healthcare Freedom Reconciliation Act of 2015
 - Restoring Americans' Healthcare Freedom Reconciliation Act of 2015(H.R. 3762)의 경우, 재정적자 변화(= 정태추계 + 거시경제적 효과)는 GDP의 0.35%로 주요 법안에 해당(아래 예시)

< 주요 법안(Major Legislation)에 대한 판단 근거(예시: H.R. 3762) >

	Billions of Dollars, 2025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Changes in Direct Spending (Outlays Only)		
Repeal Individual and Employer Mandates	-35.1	
Repeal the Excise Tax on High-Premium Insurance Plans	-4.1	
Repeal the 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	3.1	
Sum of the Absolute Values of Other Provisions and Interactions	3.0	
Absolute Value of Changes in Direct Spending	45.3	0.16
Changes in Revenues		
Repeal the Excise Tax on High-Premium Insurance Plans	-25.1	
Repeal Individual and Employer Mandates	-14.1	
Repeal the Medical Device Tax	-3.1	
Sum of the Absolute Values of Other Provisions and Interactions	7.0	
Absolute Value of Changes in Revenues	49.2	0.18
Total, Absolute Values of the Budgetary Effects of Provisions and Their Interactions	94.5	0.35

다. 국제통화기금(IMF)

□ IMF의 최근 세계경제 전망

- IMF는 지난 4월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1월에 비해 0.2%p 하향 조정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성장의 하방위험이 1월보다 커짐
 - 현재의 취약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대응(a broad-based policy response)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
 - 한국은 2016년 2.7%, 2017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난 1월에 비해 각각 0.2%p, 0.3%p 하향조정

Table 1.1. Overview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Percent change, unless noted otherwise)

	2015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anuary 2016 WEO Update ¹		Difference from October 2015 WEO ¹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World Output	3.1	3.2	3.5	-0.2	-0.1	-0.4	-0.3
Advanced Economies	1.9	1.9	2.0	-0.2	-0.1	-0.3	-0.2
United States	2.4	2.4	2.5	-0.2	-0.1	-0.4	-0.3
Euro Area	1.6	1.5	1.6	-0.2	-0.1	-0.1	-0.1
Germany	1.5	1.5	1.6	-0.2	-0.1	-0.1	0.1
France	1.1	1.1	1.3	-0.2	-0.2	-0.4	-0.3
Italy	0.8	1.0	1.1	-0.3	-0.1	-0.3	-0.1
Spain	3.2	2.6	2.3	-0.1	0.0	0.1	0.1
Japan	0.5	0.5	-0.1	-0.5	-0.4	-0.5	-0.5
United Kingdom	2.2	1.9	2.2	-0.3	0.0	-0.3	0.0
Canada	1.2	1.5	1.9	-0.2	-0.2	-0.2	-0.5
Other Advanced Economies ²	2.0	2.1	2.4	-0.3	-0.4	-0.6	-0.5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0	4.1	4.6	-0.2	-0.1	-0.4	-0.3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8	-1.1	1.3	-1.1	-0.4	-1.6	-0.7
Russia	-3.7	-1.8	0.8	-0.8	-0.2	-1.2	-0.2
Excluding Russia	-0.6	0.9	2.3	-1.4	-0.9	-1.9	-1.7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6	6.4	6.3	0.1	0.1	0.0	0.0
China	6.9	6.5	6.2	0.2	0.2	0.2	0.2
India ³	7.3	7.5	7.5	0.0	0.0	0.0	0.0
ASEAN-5 ⁴	4.7	4.8	5.1	0.0	0.0	-0.1	-0.2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3.5	3.5	3.3	0.4	-0.1	0.5	-0.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0.1	-0.5	1.5	-0.2	-0.1	-1.3	-0.8
Brazil	-3.8	-3.8	0.0	-0.3	0.0	-2.8	-2.3
Mexico	2.5	2.4	2.6	-0.2	-0.3	-0.4	-0.5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2.5	3.1	3.5	-0.5	-0.1	-0.8	-0.6
Saudi Arabia	3.4	1.2	1.9	0.0	0.0	-1.0	-1.0
Sub-Saharan Africa	3.4	3.0	4.0	-1.0	-0.7	-1.3	-0.9
Nigeria	2.7	2.3	3.5	-1.8	-0.7	-2.0	-1.0
South Africa	1.3	0.6	1.2	-0.1	-0.6	-0.7	-0.9

- 2015년 말 이후 금융 불안이 증대되고 신진국과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
 - 중국의 균형성장 경로로의 이행에 따른 성장둔화 우려
 - 원유수출국,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와 금융 불안 심화

- **2016년 선진국 경제는 2015년 수준(1.9%)에 머무는 더딘 경기회복세 예상**
 - 미국 경제는 낮은 석유가격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내수는 견실하나 강달러에 따른 외수부진으로 회복세 약화
 - 유로지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디플레이션 위험
 - 일본 경제는 올해 0.5% 성장하지만 내년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과 함께 인구 고령화와 과도한 공공부채로 마이너스 0.1%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IMF는 예측
-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개선(3.5%) 여부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달려 있음**
 - 2017년 선진국 경제는 2016년(1.9%)보다 소폭 개선된 2.0%에 머물 전망
 - 반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경제는 2016년 4.1%에서 2017년 4.6%로 크게 개선될 전망
- 2016년 세계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지난 2015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의 지속적인 negative output gap(음의 총수요갭)과 저물가로 인한 stagnation 위험 증가
 - 신흥국 시장의 금융불안 확대: 과도한 환율상승과 자본유입 감소에 따른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내수위축
 - 유가 하락에 따른 일부 원유수출국의 재정악화와 경기둔화 심화
 - 중국의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 테러, 정치 불안, 전염병, 난민유입 등에 따른 비경제적 충격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대응(a broad-based policy response)이 필요한 시점
 - 선진국은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i) 구조개혁 (ii)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iii) 적극적 재정정책** 등이 서로를 보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필요
 - 공급측면에서는 구조개혁의 중단기 영향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국가별 맞춤 전략 필요
 - ※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를 낮추거나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지출을 늘리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시장 장벽을 낮추는 개혁을 동

반한 구조개혁 추진 필요

- 수요측면에서는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낮은 이자율을 고려하면 민간의 부채조정과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할 정책조합 필요
-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고 자생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원자재 수출국은 낮은 원자재 수입이 지속됨에 따른 새로운 성장 모델을 위한 재정조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원자재 수입국은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
- 세계경제의 동반둔화 위협, 성장의 하방 위험요인 증가, 제한된 정책여력 등의 여건 하에서 성장을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다각적인(**bold and multilateral**)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 주요국 경제의 정책당국은 경기 하강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망과 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함
- 비경제적 충격이 주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필요

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보고서 작성과 홍보 관련

A.. 국방 분야 연구를 위한 주된 자료수집 방법(아시아-태평양 재균형 보고서 관련)

- 최근 CSIS는 “Asia-Pacific Rebalance 2025” 보고서에서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치가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한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를 관심 깊게 다룬 바 있음.
 - (자료수집 방법) 한반도 사드 배치 권고, 북한 정세에 대한 논평 등 주요 국방정책적 조언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 방법은 어떠한지?
 - (정부 기관과의 협조) 민간 연구소이지만 연구과정에서 미 국방부의 협조가 가능한 배경
 - (미 의회의 보고서 의뢰절차 및 대가) CSIS는 동 보고서를 미 의회의 의뢰 (congressional tasking, p.6)로 받아 작성
 - ① 민간 연구소 중 CSIS가 선택된 배경
 - ② 미 의회로부터 의뢰받는 공식/비공식 절차 존재 유무
 - ③ 보고서 작성대가 지불방식
 - ④ 기관의 자체수입 요소 및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B. 보고서의 중립성 확보 방안

- CSIS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제안보,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건의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고서의 중립성(초당파성)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 보고서 발간 전에 거치는 내부 회의 및 외부 자문 등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C. Defense 360° 관련

- CSIS 웹페이지에서 국방 분야에 대한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Defense 360° : A Source for Key CSIS Defense Analysis, one-stop shop for all things CSIS defense analysis)
 - 서브 웹페이지를 구축한 배경 및 효과
 - 향후 다른 분석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미 국방예산 관련

- 미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 CSIS의 역할, 행정부나 의회와의 업무 협력 방식
 - － 예산 편성의 어느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는지? 공식/비공식 절차가 있는지?
-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해마다 국방예산이 자동 삭감(시퀘스터)됨에 따라 국방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각군(육군, 해군, 공군)간 예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됨. 각 소요군(육군, 해군, 공군 등)이 제기하는 신규 무기체계 도입사업(구매 또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한국은 방위사업청(DAPA)에서 각 프로그램별(지휘정찰, 함정, 항공기 등)로 예산을 관리할 뿐, 각군별 방위력개선비를 별도로 추적, 관리하지 않음.
 - － 함정이나 항공기처럼 무기체계에 따라 소요군이 명확한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군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소요군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미국은 각군별로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므로 방위력개선비의 군별 분류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고, CBO에서도 이를 몇십년간 추적 관리하고 있음.
 - － 각군별 방위력개선비를 몇십년에 걸쳐 추적한 자료는 방위력개선비 예산을 분석하고 향후 군별 예산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관련

- 한국은 1991년부터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¹⁾의 예외적 조치에 따라 체결한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14~’18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주한미군과 연방공무원 월급을 제외한 주둔비용의 50% 정도를 부담).

1)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미군 주둔을 위한 시설과 구역)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 동맹관계에 근거하여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국가(host nation)가 자국 내 거주하는 미군의 안정적 활동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조치(HNS: host nation support)를 한국에서는 ‘방위비분담’이라 통칭하고 20여년 간 이 용어를 사용함.
- 1991년 약 1,000억원(1억 5,000만 달러)에서 2016년 약 9,133억원으로 9배 이상 증가, 2020년에는 1조원대 예상
- 향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extended deterrence),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절실하므로 동맹국으로서 적절한 몫을 부담할 필요
 - 그러나 매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외국군을 위하여 지원한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존재
- 적정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에 대한 입장?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지?

 - (분담금 인상 찬성론) 트럼프의 ‘peanut(한국이 땅콩만큼 방위비 분담)’, ‘무임승차’ 주장
 - (분담금 인상 반대론) GDP 대비로는 일본보다도 한국의 분담률 높은 편 국 방부 대비 방위비분담금 비율이 한국 2.7%, 일본 6.4%, 독일 1.3%이나,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미군 주둔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현황〉

* 2012년 자료

	한국	일본	독일
GDP	1.15조달러	5.98조달러	3.37조달러
국방비	290억달러	594억달러	404억달러
정규군	655,000명	247,450명	196,000명
외국군 주둔	미군 28,500명 (한국군 대비 4.4%)	미군 36,700명 (자위대 대비 14.8%)	미군 50,500명 포함 외국군 68,992명 (독일군 대비 35.2%)
GDP대비 비용분담	0.068%	0.064%	0.016%
국방비 대비 비용분담	2.7%	6.4%	1.3%
비용분담 (방위비분담금)	7억 8,213만달러 (8,361억원)	38억 1,735만 달러 (3,741억엔)	5억 2,495만달러= 5,000만달러(HNS) +4억 7,495억달러 (NATO 공동방위비)

□ 기타 기관운영 관련

A. 인력 채용 및 전문성 확보방안

○ CSIS staff 충원방식

- 국방 분야 연구진을 보면 학계, 정부 및 의회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인력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GAO, CBO, 한국의 NABO와 같은 의회지원조직 내부에서 국방 분야 등 특수 영역에서의 분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언

- Andrew Hunter(Director) 씨는 CSIS 근무 전에 의회 Armed Services Committee, 국방부(DoD)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긴급작전소요(Urgent operational Needs)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CSIS에서 업무를 하며 이전에 의회, 행정부에서 일할 때 업무 수행의 초점이나 관점, 방법론 등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DoD에서의 직접적인 근무 경력이 없고, 학부 전공도 행정학, 경제학 등 국방 분야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는 staff의 경우 국방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B. 국내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현황(MOU 체결, visiting scholar 운영 등)

C. 향후 CSIS의 중점 연구방향 및 해당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한 CSIS의 장단기 계획

마. 출장 면담자 명함

- Congressional Budget Office(미국의회예산처)



Jeffrey M. Holland
Chief, Projections Unit
Budget Analysis Division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ord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Phone (202) 226-2880
Fax (202) 226-0793
jeffh@cbo.gov



Theresa A. Gullo
Assistant Director for Budget Analysi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ord House Office Building
Room 430
Washington DC 20515

Phone: (202) 226-2800
Fax: (202) 226-1366
teri.gullo@cbo.gov

www.cbo.gov



Mark P. Hadley
General Counsel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ord House Office Building
2nd & D Streets, SW
Washington, DC 20515

Phone (202) 226-2633
Fax (202) 225-7509
Email: mark.hadley@cbo.gov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 국제통화기금(IMF)



CHANGYONG RHEE

DIRECTOR
ASIA AND PACIFIC DEPARTMENT

TEL: (202) 623-9941
FAX: (202) 589-9941
MOBILE: (202) 813-8831
EMAIL: CRHEE@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



JOONG SHIK KANG

SENIOR 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TEL: (202) 623-7067
FAX: (202) 586-7067
EMAIL: jkang@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



GEE HEE HONG

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OFFICE: +1 (202) 623-9623
MOBILE: +1 (202) 412-9055
EMAIL: ghong@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



JONGSOON SHIN
SENIOR ECONOMIST
ASIA AND PACIFIC DEPARTMENT

TEL: (202) 623-5444
FAX: (202) 589-5444
EMAIL: jshin2@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700 1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1